# 尹 외교 논란·쟁점 법안·예산 심사… 여야, 커지는 대립각

## 민주 '윤 대통령 비속어 참사' 대국민 사과, 외교·안보 라인 경질 촉구
## 7대 입법 과제 관철 의지…민생예산 복구 등 내년 예산안 송곳 심사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윤석열 대통령 외교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 등을 두고 일찌감치 충돌하고 있는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힘겨루기는 오는 28~29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거쳐,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여야 대치 전선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빈손·비굴·막말' 외교로 요약되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경질 촉구는 물론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긴급 소집해 해외 순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폄훼하고 '억지 외교참사' 프레임을 만들어내 국익에 반하는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사적 대화임에도 민주당이 흠집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까지 소환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충돌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및 예산안 심사에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기초연금 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 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법 등을 '7대 입법 과제'로 이름 붙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분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주당 주도의 민생 예산도 복구하겠다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를 세금을 잡아먹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강제 매입,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재정 및 소비자 부담만 키운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 산업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처리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 등 민생 현안에서도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의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논문 표절 의혹 사건 그리고 관저 공사 특혜 수주 관련 증인들을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는 증인 명단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법사도 신청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정면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국토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임 김현미·변창흠 전 장관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 국토위에서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비롯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증인이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이재명호 '대안 야당' 이미지 굳히기

## 28일, 대표 취임 한달…민주당 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출범

오는 28일 취임 한 달을 맞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호'가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연일 '민생 메시지'를 발신, '유능한 대안 야당' 이미지를 굳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정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일하는 정당' 메시지는 주효했다"며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전략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당시 불거졌던 계파 간 갈등이 새 지도부 출범 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을 두고는 이 대표의 '소통 리더십'이 일궈낸 성과라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경선 경쟁자였던 박용진·강훈식 의원은 물론 당내 초·재선, 3선 이상 중진들과 잇따라 오·만찬을 하는 등 당내 스킨십을 강화했다.

정기국회 주도권 싸움에서 169석 거대 야당의 위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당내 통합을 통한 단일대오 구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취임 초반부터 불어닥친 검찰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가 임기 내내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발언) 혐의는 물론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표가 넘어야 할 리스크는 첩첩산중 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들 의혹과 관련, 죄다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법률위원회와 별도로 당내 매머드급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은 소위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한 대응 기구였다. 또한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개인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정 공방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직 인선 과정에서 사실상 '탕평 인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내부 파열음을 언제든 키울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이병훈 "지방대 정원 축소 원점 재검토"

## 대정부 질문…호남·수도권·영남 3각축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지방대 정원 축소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 줄 것과 호남·수도권·영남에 3각축 반도체특화단지를 육성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2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몸집 줄이기에 나섰는데 감축 인원의 88%가 지방대 정원이다"면서 "이는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지방대 정원 감축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5년까지 대학정원 1만5000명을 감축키로 한 가운데 그 대부분을 지방대에서 줄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라는 게 이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지방대 소멸은 지역 소멸의 신호탄"이라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대학이 있어야 하고, 그 대학들을 취업도 잘되고, 지역과 연계가 튼튼한 좋은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역점법안인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법안'에는 수도권 기존 특화단지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만 있고 지역은 없다고 질타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5년간 반도체 분야에 522억 달러를 포함, 모두 2800억 달러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 Science Act)'이 지난 8월 발효됐는데 주목할 점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20개 기술혁신 허브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미국처럼 '반도체특화단지 육성정책'이 영남과 호남, 수도권을 3각축으로 균형 있게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호남, 이대로 좋은가'

## 국회서 토론회…정치 등 논의

호남대안포럼과 지역평등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 '민주화의 성지, 호남 이대로 좋은가'가 25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Post-DJ시대 호남 정치의 흐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조귀동 작가가 '지방소멸 시대의 호남발전',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위원장이 '호남, 지역문제 아닌 이념과 체제 선택의 문제'를 발표했다.

호남대안포럼의 채명희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는 호남의 지지율 상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호남의 변화를 두고 우리 사회의 좀 더 깊은 성찰과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HONAM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호남의
역사 · 문화에
빛을 더할
소중한 옛 자료를
찾습니다.

우리 고장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와 고문서·고서화 등 기록유산은
• 조상의 생활 지혜·정신 역량을 밝혀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 멸실·훼손 위기에서 체계적인 수집·정리와 안전한 보존·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호남권 한국학 자료의 수집·보존·연구·편찬·보급·확산을 통하여 호남학 및 한국학의 진흥과 민족문화 선양을 위하여 공동 설립한 기관입니다.

• 항온·항습 및 소방·보안 안전설비 구축 수장고 운영(5만여점)
• 수장고 소독 및 훈증, 훼손 자료 보존처리 및 영구 복제
• 평판·목록작성·이미지 촬영·상세해제·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정리
• 문화재 지정 협조 및 관리 운영(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 345점)

▶자료 기증·기탁 대상
호남지역과 관련된 문중·기관·개인·단체 소장자료 (고문서, 고서, 서화, 유물, 근현대자료)

▶기증 및 기탁 방법
• 기증 : 소유권과 보존관리를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일임하는 형태
• 기탁 : 소유권을 소장자가 유지하면서 보존관리를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일임하는 형태

▶기증 및 기탁 절차
기증·기탁 문의 → 현지조사 → 기증·기탁 협의 → 수장고 입고

▶기증·기탁자 예우
• 기증·기탁 보관증서 및 감사패 증정
• 최적의 항온·항습시설을 갖춘 수장고에서 보존·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웹서비스 제공
• 자료집 발간 및 학술대회·세미나 개최(다량 기탁처)

▶ 기증·기탁 문의
전 화 : 062-603-9623 (9618, 9627)
누리집 : www.hiks.or.kr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4층)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호남학 및 한국학의 진흥과 민족문화 선양에 앞장서겠습니다.